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64
----------	------

발의연월일 : 2025. 2. 11.

발 의 자 : 박덕흠 · 임태영 · 서천호
조지연 · 고동진 · 김예지
김정재 · 이종배 · 강승규
구자근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조치의무사업자 중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제1항 중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5제7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조치의무사업자 중 실시간 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22조의 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u>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p>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 ⑤ (생 략)</p>	<p><u>1.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u> <u>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u> <u>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u> <u>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u></p> <p><u>2. 제22조의5제7항에 따른 불법</u> <u>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u> <u>축·운영하지 아니한 자</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